

### 비수도권 민주당 광역지자체장들

# 지방특화형 기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건의

김관영 지사 등 4개 광역지자체장, '먹사니즘 해결 균형발전'에 공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뜻을 모아 '지방특화형 기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뜻을 모아 '지방특화형 기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비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지자체장 4명은 지방특화형 기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의 국회 통과를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이번 건의문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은 그동안 국가와 행정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방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자는 것이다.

즉, 프런티어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먹고사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던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해주는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

은 기업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에 한해 기업상속 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의 한도를 없애는 '지방특화형 기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공동 건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상속 공제 확대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지방이 소멸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자 지방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의 주도하에 지난 8월 14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서도 환영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9월 30일 예정인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기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민주 이성운 의원, “검찰의 통신사찰에 대한 비판 거세… 통신비밀보호법 발의할 것”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비밀 자유 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통신비밀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회의사당 브리핑룸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국회 검찰개혁포럼 소속 7명과 함께 “통신이용자 정보제공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검찰의 마구잡이 '통신사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올해 8월 초 서울중앙지검 부패수사부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사실이 알려져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바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로 이유로 무려 3천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등한 수준에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그런데도 통신이용자 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 내부 결재만으로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제공 사실 통지도 장기간 유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의 민감한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조회할 수 있고,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충분히 통제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 등이 26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이용자 정보제공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 받은 통신 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 건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022년 433만9,000여건에서 2023년 463만여건으로 한 해 동안 약 29만건이 증가했는데, 이 중 검찰의 증가분이 약 17만3,000여건으로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검찰의 정보수집 비중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어느 곳보다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 관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과 관련해 영장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제공 사실 통지도 장기간 유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통합 이관함으로써,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했으며, 제공 요건 또한 압수수색에 준하도록 강화하여 무차별 조회를 방지하고,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 절차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지 제도에 대해서도 유예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정 기간 후 삭제 의무화하는 등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을 통해 통신의 가치가 갈수록 더해지는 디지털 사회에서, 통신의 '자기결정권적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 제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만호 기자



'성평등한 전북자치도 만들어 나가자' 26일 '편견 없는 세상, 함께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전북여성가족재단 일원에서 '제13회 젠더문화축제'가 열린 가운데, 전정희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영역 규정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 9(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26일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팽성규)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추가함으로써, 수변도시에 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물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 “전북 청년 참여예산 플랫폼 적극적인 홍보·지원책 필요”

김슬지 도의원, 청년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 촉구  
도내 청년들의 형태 담아내는 정책 수립 중요성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기획행정위원회)이 청년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슬지 의원에 따르면 청년 참여예산제는 “도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발표한 사업을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로 시행을 위한 의뢰 등 필수시설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 문턱을 완화하여 수변도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지만, 현재까지 제안된 정책은 단 1건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청년 참여예산제를 통해 도내 청년의 고민과 문제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슬지 의원은 12대 도의회 임성 이후 도내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5분 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청년 정책 활성화와 청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적극 요구해 왔다. /이만호 기자

### 대표발의 민생법안 5개 본회의 통과 ‘기업’

민주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발의한 5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돼, 22대 국회 개원 3개월여 만에 괄목할만한 입법성과를 보였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비롯한 9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을 담는 신분증 위조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노래방, PC방, 영화관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통과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다양한 전문가 위촉, △전승교육사 국가유산수리기능사 자격 인정, △휴직, 기술능력 등의 사유로 등록요건 일시적 미달의 경우 영장정지 처분의 예외사유 규정, △부실 국가유산수리업자 제재 강화로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법안이다. /이만호 기자

### 고창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고창범대위)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마지막 관문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2차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고창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에는 고창범대위와 소속 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하였고, 고창군의회에서도 조규철 의원(고창범대위 위원장)과 임종훈 산업건설위원장(고창범대위원)을 비롯하여 조민규 의장, 차남준 부의장, 이선덕 운영위원장, 이경신 의원, 오세환 의원이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고창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오는 2차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1차 공청회에서 한수원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비록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주민공청회에 참여해 범대위의 의견과 요구를 개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민규 의장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고창군민의 정신적·심리적 치유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고창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 문제도 앞장서서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농지이용 은퇴직불

신청·접수

지원내용

- 농지 100㎡ 이상: ① 농지 임대료 + ② 직불금 최대 50만원/ha
- 농지 50㎡ 이상: ① 농지 임대료 최대 30만원 + ② 직불금 최대 40만원/ha

가입요건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65세 ~ 79세 농업인

지금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 중인 전농지 및 경지 정리된 비전농지 농지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권역 지사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577-7770